

경축! 4·29 재보선 한나라당 참패와 진보신당·민주노동당 약진

진보 진영이 반MB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다

4.29 재보선은 통쾌한 MB심판의 장이었다. 그동안 이명박의 안하무인식 반민주·친재벌·반서민 횡포에 목덜미가 뺏겨지고 입맛까지 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나라당의 선거 참패 소식은 십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다섯 석 중 단 한 석도 얻지 못했고 11곳의 기초 단체장·의원 선거에서도 고작 한 석을 얻는데 그쳤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단일 후보를 낸 울산 북구에서 조승수 후보는 정몽준의 전폭적 지원을 받은 한나라당 후보 박대동을 큰 표차로 따돌리며 당선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전남 장흥과 광주에서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기초 의원을 당선시켰다. 조승수 후보의 당선으로 진보신당은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이명박에 대한 반감이 어찌나 컸던지 민주당은 노무현 부패 사건으로 위기에 빠진 가운데서도 수도권 격전지인 부평을에서 반사이익을 얻으며 당선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며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한 정동영은 민주당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분열만 가속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김응호 후보는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 인천 부평을에서 끝까지 사퇴 압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선했다. 이명박의 한나라당뿐 아니라 부패한 민주당에도 독립적인 진보 정당이 존재를 보여 준 것이다.

이명박은 심지어 한나라당 내에서도 체면을 구겼다. 경주에서 ‘형님’ 이상득의 압력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친박계 후보 정수성이 친이명박 후보 정종복을 10퍼센트 이상 따돌리며 당선했다.

이번 선거 결과 때문에 한나라당 내에서는 친박계의 입김이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진보정당들의 약진은 정치 양극화의 왼쪽 축을 형성할 가능성을 보여 줬다.

자신감

이명박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다는 보수 언론들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결과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냈다. 이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명박으로서는 촛불 1주년을 코앞에 둔 선거에서 참패할 경우 다시금 ‘저항 세력’ 이 고개를 들 수 있다는 두려움에 초조했을 것이다.

그래서 MBC PD들을 체포하는 등 언론탄압을 강화하고 수십 명의 시위 참가자들에게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운동을 위축시키려 한 것이다.

물론 이런 막가파식 공격 때문에 촛불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후보 단일화가 울산 북구 선거 승리에 결정적이었다.

항쟁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위촉됐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촛불 시위가 잦아든 뒤에도 조직된 노동자·학생·좌파 등이 이명박의 공격에 완강히 맞섰고 부분적으로 승리를 거뒀다는 사실이다.

비록 지난해 촛불 같은 대규모 대중 행동이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투쟁 덕분에 올해 초 용산 참사와 2월 입법 투쟁

등에서 거둬 밀린 이명박은 최근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패배의 쓴 맛을 봐야 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노무현과 민주당 지지자들을 위축시키려고 터뜨린 노무현 부패 사건도 판세를 뒤집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다시 말해 조직된 세력의 끈질긴 저항이 이명박의 반동 ‘속도전’에 제동을 걸

었고, 이번에도 특히 울산에서 두 진보정당이 단결해 한나라당을 패퇴시켰다. 흥미롭게도 이명박에 대한 우파적 반대가 결집한 경주와 진보 후보들이 당선한 곳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높았다. 이명박 몰락으로 박근혜가 수혜를 입을 수도 있지만 중도좌파가 반MB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재보선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자신감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고비였다. 이명박이 참패하고 진보진영이 약진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겠지만 반대로 진보진영이 지지부진해 구심점 역할을 못 해낸다면 이명박의 몰락으로 박근혜만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비관적 견해가 힘을 얻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울산 북구에서 벌어진 지난한 후보 단일화 과정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했다.

그 점에서 기나긴 산통 끝에 전체 운동을 위해 올바른 결론을 내린 민주노동당 김창현 후보와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에게 갈채를 보낸다. 특히, 대의를 위해 승복한 김창현 후보의 대승적 결단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좌파는 그 동안의 투쟁과 이번 선거에서 얻은 자신감을 더 많은 곳으로 확산시켜 제2의 촛불을 만들어 내는 데 – 기다릴 것이 아니라 – 기여해야 한다. 그러려면 이명박의 경제 위기 책임 전가와 민주주의 역주행에 맞서 단호히 싸우는 동시에 급진적이면서도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을 건설하려는 노력도 게을리 해선 안 된다.

진보 세력이 이명박에 불만과 분노를 느끼는 훨씬 광범한 대중에게 이번 선거에서 얻은 자신감을 확산시킬 수 있다면 이명박 몰락 시나리오의 마지막 장을 넘기는 것도 그다지 먼 미래의 일이 아닐 것이다.

정호중 기자 | rednuc@left21.com

대우버스 파업 승리

대우버스 노동자들이 해고를 막아내다

지난 4월 27일, 대우버스 노동자들이 ‘5백7명 정리하고 전면 철회’라는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3월 11일 사측이 직원의 절반이 넘는 5백7명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한 후 대우버스 노동조합과 대우버스 사무지회는 ‘구조조정 저지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이하 공투본)를 구성했다. 공투본은 3월 31일부터 부산 전포·동래·반여 공장을 점거해, 수출 출고를 저지하는 과감한 투쟁을 벌였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경찰력 투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부산·양산 금속노동자 1천여 명도 4월 15일에 연대 집회를 열고 부산 시청에서 전포 공장까지 행진했다.

사측은 4월 9일부터 직장 폐쇄를 했고, 정부는 경찰력 투입을 경고하며 파업을 파괴하려고 했다. 그러나 대우버스 생산



대우버스 노동조합은 대우버스를 점거하고 투쟁을 벌였다.

직·사무직 노동자들은 이런 협박에 굴하지 않고, 단호하게 점거 파업을 계속했다.

특히 대우버스 대주주인 영안모자 회장 백성학의 ‘창업 50주년 기념식과 축하연’이 벌어질 서울 하얏트 호텔 앞에서 4월 27일부터 3박 4일 노숙 상경투쟁

과 거리 시위를 하려고 준비했다.

결국 사측은 상경투쟁 하루 전인 26일에 ‘정리하고 전면 철회’라는 백기를 들었다. 생산직·사무직 공동 파업이 가한 타격과 청와대·재계 인사까지 오는 ‘창업 50주년 축하연’이 무산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동안 생산직과 사무직 노동조합으로 나뉘어 있던 노동자들은 이번 투쟁에서 강력한 단결을 통한 승리를 경험했다. 이런 단결은 계속 확대·강화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단결도 강화해야 한다.

비정규직만 일하는 울산공장은 이번 파업 기간에도 생산을 계속했다. 그래서 대우버스 노조 김화수 사무지회장은 “정규직·비정규직이 … 하루라도 빨리 통합해서 자본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리의 자신감이 충만한 지금부터 정규직이 앞장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대우버스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 시기에 노동자들의 단결과 단호한 점거 파업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보여 줬다.

박수원 (부산 현장 통신원)

한국 경제, 과연 바닥을 쳤는가?

한국 경제의 조기 회복론이 술술 피어나고 있다. 지난 2월 IMF 총재 스트로스-칸은 한국이 가장 빨리 회복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통계 지표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삼성전자·LG전자의 나쁘지 않은 실적에 근거하여 IT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무역수지도 올해 3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환율도 하향 안정되고 있다’, ‘작년 4분기의 -5.1퍼센트 성장에서 올해 1분기에는 0.1퍼센트 성장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다’ 등등.

이런 통계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 먼저 지적할 것은 세계적인 주류 연구소들의 경제전망들이 하나같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이다. IMF는 지난 11월에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2퍼센트로 잡았다가 3개월 뒤인 올해 2월에는 -4퍼센트로 6퍼센트 포인트나 낮추었다.

더 중요한 문제는 통계의 진정한 의미다.

한국의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다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수출 증대 때문이라기보다는 수입의 급격한 감소 때문에 흑자를 기록했을 뿐이다. 더욱이 설비투자의 기반이 되는 기계류의 수입은 지난 2월보다 더 감소했다. 이것은 극심한 내수 침체를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4월에 발표한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모두 하락하고 있다.

제조업 성장을 하락은 훨씬 더 심각한데, 지난 1분기 지표는 1970년 이후 최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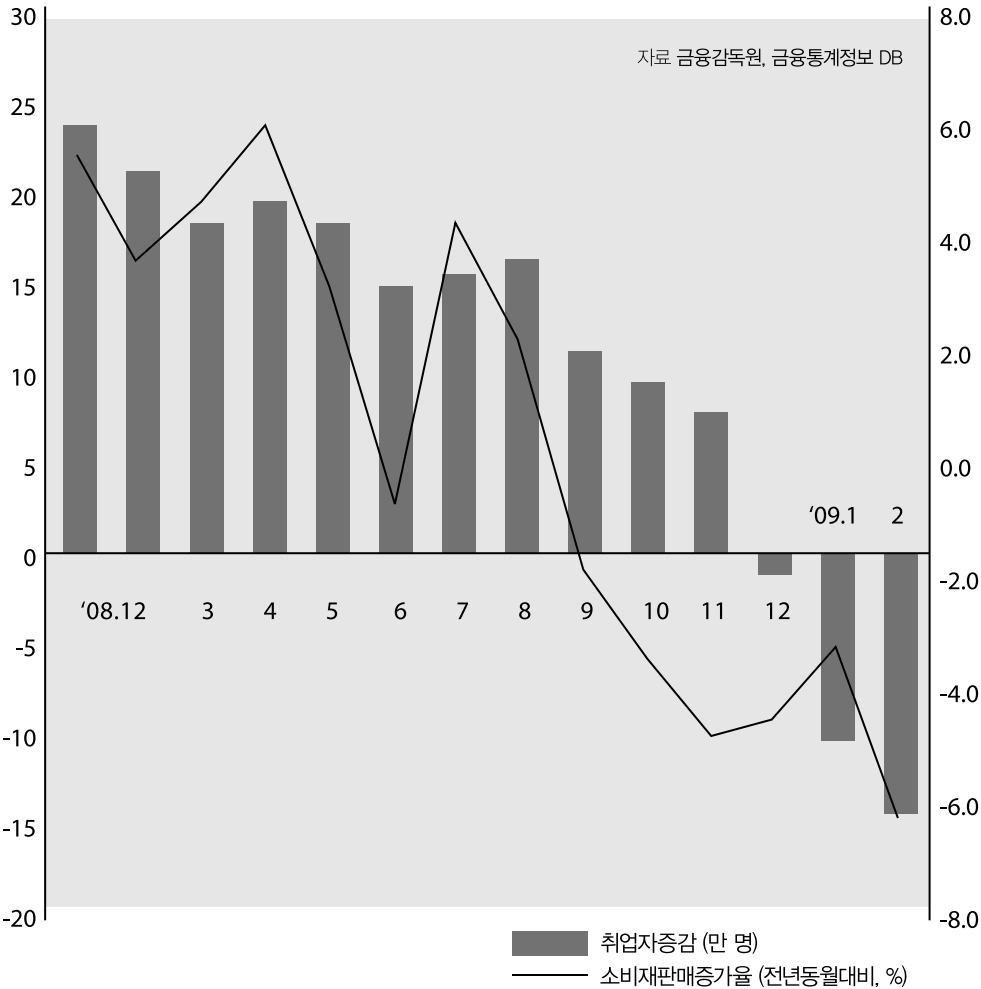
수익성 악화

이런 모든 거시경제 지표들은 한국 경제가 회복되기는커녕 바닥을 확인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만든다. 그 외에도 한국 경제에 온갖 암조들이 도사리고 있다.

가계부채가 8백2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가 1990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가계가 금융부채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닫고 있어 보유하고 있는 자산(펀드나 아파트 등)을 처분하지 않으면 갚기 힘들게 됐다는 의미다.

전체 고용인구가 줄어들고 실업자도 늘어나고 있다. 신규고용은 줄어들고 비정규직부터 시작된 해고 바람은 정규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자리 감소와 임금 삭감은 내수 축소로 이어져 경기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서 보듯이 한국의 주택시장도 언제 거품이 꺼져 주택담보대출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나타날지 알 수 없



는 일이다. 주택가격 하락과 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다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진다.

미국과 더불어 독일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을 면하지 못할 전망이다. 우리는 연일 선진국 경제들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뉴스 보도를 접하고 있다. 선진국 시장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형적인 수출주도형인 한국 경제가 경기회복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착시 현상

최근 한국과 중국 같은 일부 국가들의 경제 지표가 그나마 최악을 모면한 것으로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지출의 증가 때문이다. 중국과 한국은 작년 하반기 이후 각각 GDP의 20퍼센트와 6퍼센트에 가까운 재원으로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고, 이런 효과 때문에 급락하던 경제가 잠시 주춤거리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회복을 위해서는 선진국 시장이 회복되거나 내수가 확대돼야 하는데,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그 가능성은 낮다. 일부 대기

업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거두어들이 이윤을 신규투자로 돌리지 않고 움켜지고 있다. 투자 수익률이 낮기 때문이다. 내수의 또 다른 요소인 민간소비도 고용 사정 악화로 확대될 것 같지 않다.

한국 경제의 회복 근거로 들고 있는 IT경기는 오히려 이번 위기의 본질을 잘 보여 준다. 세계 반도체 시장은 작년까지 20퍼센트 과잉공급으로 반도체칩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투자는 계속 진행됐고, 그 결과 독일 인피니언은 망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의 공장 가동률은 51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반도체 경기가 회복된다 할지라도 과잉투자된 자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수익성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단기외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유럽발 위기가 서유럽으로 전이되거나 미국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계속 나타난다면 환율이나 무역수지 등 대외경제 지표들은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 정녕 한국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는 어디에도 없다.

이정구 경성대학교 연구교수

김승섭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 사무국장이 들려주는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단결 투쟁 경험과 교훈

국내 산업에서 건설업종은 이주노동자 비중이 가장 큰 부문 중 하나다. 건설업은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건설노조 조합원의 거의 절반이 일자리가 없을 정도”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를 탄압하고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사이의 분열을 부추겨 전반적인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려 한다.

이에 맞서 이주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조직하며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단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승섭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 사무국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경기도에서 이주노동자들과 연대하는 문제가 본격 제기된 것은 2004년 용인 동백지구 투쟁부터예요. 당시 경기도건설노조는 용인 동백지구 원청사 업체 22곳과 하청사 업체 29곳을 상대로 건설 현장 최초로 지구단위의 파업 투쟁을 벌였죠.

“당시 투쟁이 승리하는 데서 이주노동자들의 연대가 결정적이었어요. 이 투쟁 이후로 현장에서 노

동조합이 힘을 가지려면 이주노동자들도 조합원으로 조직해야한다는 생각이 확산되기 시작했죠.”

경기도 건설 현장에서 이런 소중한 연대의 전통은 2006년 일산 2지구에서 있었던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철폐 투쟁과 최근 광명 신촌 지구에서 시작된 이주노동자 해고 반대 투쟁으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조직하지 않고 내국인 노동자만 파업을 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수도권 아파트 건설 현장의 경우 이주노동자 비율이 80퍼센트가 넘는 정도예요.

“이주노동자들이 대체로 젊어서 힘이 좋은 데다 한국에 오래 머물면서 숙련도도 높아져 건설 현장에서 이주노동자 비율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이주노동자가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는가?

“건설 현장의 내국인 노동자들 사이에는 이주노동

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기존 조합원들이 거부반응을 보인 적도 있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사용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신분이 불안정한 것을 이용해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내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이주노동자들은 이렇게 돈도 적게 받고 오래 일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고 압력을 넣지요.”

정부와 기업주들이 만들어 놓은 ‘바닥을 향한 경쟁’은 그렇게 작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건설노동자들은 얼마든지 이런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 줬다.

“토론과 논쟁, 특히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는 과정을 거치며 내국인 노동자들의 의식이 바뀌더라고요.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는 지난해 투쟁을 겪으며 내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 모두 조합원이 늘었습니다.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단결해서 싸워야만 근로조건, 고용 등 건설현장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명훈 기자 | jomh@et21.com

돼지독감과 자본주의

각종 언론의 1면이 목시문적이다 — 새로운 전염병 돼지독감이 세계를 집어삼킬 위험이 있다.

이런 우려의 근거는 실질적이다. 통상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통틀어 1년에 1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다.

지금껏 가장 치명적인 인플루엔자 발병 사례는 1918~1919년에 있었다. 그해 겨울에만 전 세계 인구의 2퍼센트(약 4천만~5천만 명)가 숨졌다.

돼지독감이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은 예견됐던 일이다. 인플루엔자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돌연변이를 일으켜 새로운 변종들을 만들어 낸다. 이미 여러 인플루엔자 변종들이 숙주의 종을 뛰어넘어 세계적으로 전염이 확산된 바 있다. 1957년과 1968년 인플루엔자 전염은 돼지를 숙주로 조류 바이러스와 인간 바이러스가 결합한 데서 비롯했다고 알려져 있다.

극심한 빈곤은 인플루엔자 전염 — 누구에게, 어떻게 번지는가 — 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다. 1918~1919년 인플루엔자 전염으로 사망한 사람 중 2천만 명 이상이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 거주했다.

서방 지도자들이 후원하는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건 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전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인플루엔자 변종을 밝혀내고 발병 지역에 충분한 치료제를 보급한다는 것이다.

백신

각국 정부들은 타미플루 같은 복제 치료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이 신종 인플루엔자에 맞는 백신 생산에 협력하지 않는 것은 많은 신종 인플루엔자가 전염병 수준까지 이르지 않으면 제약 회사가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부유한 나라들조차 웬만한 인플루엔자 전염에 대비할 백신을 비축해 놓지 않는다. 영국 정부가 확보한 치료제는 전체 인구의 절반 분량이다.

신자유주의 의제 중 하나인 공중보건에 대한 거듭된 공격 때문에 이 문제에 대처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돼지독감 같은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는 핵심 요인은 적절한 규제나 생물학적 안전장치 없는 공장식 축산이다.

한 좁박에 안되는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식품 생산을 좌지우지 한다.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을 한 곳에 몰아넣는다.

영국에서는 양계장의 3분의 2가 10만 마리가 넘는 닭들을 한 곳에 몰아넣는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돼지 6천5백만 마리가 고작 6만 5천 개의 시설에서 사육된다. 1965년에는 돼지 5천3백만 마리가 1백만 개 이상의 농장에서 길러졌다. 이처럼 대규모 사육 환경에서 동물들은 병에 더 취약해지고, 병은 빠르게 전파돼 더 치명적인 형태로 진화할 수 있다.

동물들의 발육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키우려고 기업들은 엄청난 양의 항생제를 투여한다. 이 중 일부는 인간의 질병을 퇴치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기도 하다.

축산업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완화한 것도 위험을 더 키웠다. 바로 지난해에 [영국] 재무장관 앨러스테어 달링은 “감시와 강제에서 좀더 위험부담이 큰 방식을 채택해 동물 질병 감시 체계 비용을 줄이고, 또 기업들도 이 비용을 부담하게 해” 예산 4천4백만 파운드[약 8백65억 원]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식품과 보건, 의약품에 대한 기업의 지배가 인플루엔자 전염 위험에 한몫했다. 이런 기업들이 국제 정치를 지배하도록 용인한 정부의 조치들도 마찬가지다.

미국 저술가 마이크 데이비스가 말한 것처럼, “멕시코 정부의 가축 질병 감시에 대한 정치적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그러나 멕시코 국경 북쪽[미국]의 상황도 결코 낫지 않다. 이곳의 감시 체계는 엉성하게 짜맞춘 법질서에 불과하다. 축산 기업들은 위생 규제를 마치 자신들이 노동자와 동물 들을 다룰 때처럼 하찮게 여긴다.”

사이먼 바스케터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 기자 번역 조명훈 기자

프랑스 노동자 투쟁과 반자본주의신당(NPA)의 성장



4월 2일 NPA 주최 프랑스 식민지 과달루페 총파업 지지 토론회

사진 출처 <http://www.npa2009.org/>

최근 전 프랑스 총리 도미니크 빌팽은 “프랑스에서 곧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과장일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 주류 언론은 빌팽을 웃음거리 삼기는커녕, 현 상황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도대체 프랑스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경제 위기와 노동자 투쟁

몇 달 전, 사르코지는 “앞으로 파업이 일어나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1월과 3월에 수백만 명이 하루 총파업을 벌였다. 최근에는 민간 부문에서 ‘사장 감금’ 과 공장점거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 사르코지 당선 직후부터 공공 부문, 학생, 이주민의 저항이 끊이지 않았다. 2008년 하반기 경제 위기의 충격이 프랑스에 몰아닥치면서 이런 갈등은 더 첨예해졌다. 노동부 장관은 공식 실업률이 16퍼센트에 육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청년 실업률이 20퍼센트가 넘을 거라고 본다.

최근 노동자 투쟁은 대부분 기층이 주도해 시작한 자발적 행동이었다. 도요타에서는, 파업 참가자들이 6명당 1명씩 대의원을 뽑아 파업위원회를 만들고 파업 신문을 발행했다.

5월 1일에는 프랑스 전역에서 수백만 명이 대규모 시위를 할 것이다. 모든 노동단체가 함께 행진할 예정인데, 이는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처음이다.

상당수 노동자들은 간헐적 파업과 시위로 압력을 넣는 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 실제로 3월 19일 하루 총파업 후 여론 조사를 보면, 59퍼센트가 ‘운동의 지속’을 원했고, 22퍼센트가 좀더 구체적으로 ‘전국적 총파업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연맹노조 지도자들과 사회당뿐 아니라 좀더 왼쪽에 있는 프랑스 공산당(PCF) 지도자도 무기한 파업에 반대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를 모을 수 있는 힘, 즉 민주적 리더십이다. 프랑스 반자본주의신당(NPA) 창당과 성장은 그 가능성을 보여 주는 매우 주목할만한 사건이다.

NPA 창당

NPA는 올해 2월 첫 주말, 파리에서 대의원 1천여 명이 참석한 창당대회를 열

었다. 그 전날 당원 3천2백여 명을 보유한 트로츠키주의 조직 혁명적공산주의동맹(LCR)이 당을 해체하고 NPA에 결합했다. 이들이 NPA 창당에서 핵심 뼈대 구실을 했다. 그러나 당원 수(약 9천 명)에서 볼 수 있듯이, NPA는 LCR의 재판이 아니다.

NPA 강령의 핵심은 착취 · 소외 · 전쟁 · 환경파괴를 낳는 “자본주의와 단절”이며 “개량한 자본주의도, 옛 소련처럼 소수의 관료들이 모든 결정을 독점하는 관료 독재 사회도 아니다. 보통사람들이 사회의 부를 민주적으로 소유 · 통제 · 분배하는 사회” 건설이다.

그래서 “투쟁의 사회화”를 당면 과제로 내세운다. 이를 위해 “사회자유주의[신자유주의]에 투항한 프랑스 사회당에서 완전히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NPA의 인기는 지도자인 올리비에 브장스노의 인기와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브장스노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묻는 여론 조사에서 두 달 연속 40퍼센트 이상 지지를 받았다. 사회당 지도자는 노동자들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사장 감금’은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브장스노는 노동자들의 행동을 완전히 옹호하면서, 진정한 폭력은 노동자의 세금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정리해고에는 속수무책인 정부와 기업주들이 저지른다고 비판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브장스노를 ‘자본주의 미래를 좌우할 50인’ 중 한 명으로 선택했다. 사실, 브장스노에 어울리려면 ‘자본주의 미래를 위협할 50인’으로 바뀌어야 마땅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를 모을 수 있는 힘, 즉, 민주적 리더십이다. 프랑스 반자본주의신당(NPA) 창당과 성장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우 주목할만한 사건이다.

NPA가 부상한 배경

가장 중요한 배경은 1995년 공공부문 총파업 승리부터 2006년 최초고용계약법(CPE) 반대 투쟁까지 계급투쟁이 상승하고 새로운 투쟁 세대가 등장한 것이다.

다른 한편, 1980년대 미테랑 집권 이후 시작된 이른바 ‘복수 좌파’, 또는 ‘제도 좌파’(사회당 · 공산당 · 녹색당)의 우경화, 특히 1997~2002년 집권 사회당 정부의 급속한 우경화 — 이전 우파 정부 두 개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민영화를 추진했다 — 로 기성 정치에 대한 환멸과 좌파의 공백이 생겨났다.

노동자투쟁(LO)과 LCR 두 트로츠키주의 극좌파 정당은 이런 왼쪽 공백을 메우려 시도했다. 2002년 대선에서 두 정당 후보들이 도합 10퍼센트를 득표한 것, 특히, 당시 27살 우체국 노동자였던 브장스노가 첫 대선 출마에서 공산당 후보를 앞지르는 성과를 거둔 것은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도 좌파’에 대한 환멸에서 가장 먼저 수혜를 입은 것은 대안세계화 운동 단체, 특히 아탁(ATTAC, 토빈세도입시민연합)이었다. 아탁의 회원수는 정점에 이른 2005년 초에 3만 5천 명이었다.

아탁은 대안세계화 운동 초기의 지배적 사고인 ‘정치나 정치정당은 필요 없고 사회운동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대표했다. 이것은 제도 좌파에 대한 실망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운동이 자생적으로 상승할 때는 상관 없지만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이 발발하고, 2002년 대선에서 나치 후보 르펜이 약진하는 등, 일관된 정치적 입장을 내놔야 하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컸다. 첨예한 정치적 문제 앞에서 교육과 로비 등 비정치적 활동에만 집중하지는 주장의 약발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아탁이 2006년 내부 선거 부정 스캔들로 큰 타격을 입은 후 주로 사회당 왼쪽의 좌파정당들이 주도해 공백을 메우려 했다. 당시 2005년 유럽헌법 반대 캠페인 승리의 여세를 몰아 반신자유주의 단일 후보를 내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포괄적 반신자유주의정당을 조직하자는 주장이 상당히 호응을 얻었다. 투쟁의 성과를 사회당이 ‘말아먹는’ 상황을 더 이상 반복할 수 없다는 대중적 정서 덕분이었다.

그러나 단일 후보 선출 방식과 이후 방향에서 좌파 정당 사이에 상당한 입

장 차이가 있었다. 사회당 좌파와 PCF는 “아무도 배제하지 않는 좌파 연합 건설”을 주장했고, LCR은 단일 후보 선출 노력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사회자유주의 좌파와 반자본주의 좌파”로 옥석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 말, 두 주장이 접점을 찾지 못했고, 단일 후보 선발과 포괄적 좌파 재결집 시도는 좌절했다.

아이하리닌 것은, 독자 대선 후보를 발표하고 반자본주의 원칙을 고수해 단일 후보와 좌파 재편에 걸림돌이 됐다는 비난을 받은 LCR이 2007년 대선을 기점으로 좌파 재편을 주도할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재편의 기준은 ‘반자본주의’였다.

당시 ‘아작론’ 덕분에 사회당이 좌파표를 싸쉴이한 상황에서 유독 브장스노만 2002년 대선 때보다 득표를 늘려 1백50만표(4.3퍼센트)를 얻었다.

LCR이 가장 일관되고 진지하게 우파 정부뿐 아니라 사회당의 시장주의, 공산당의 사회당 추수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했기 때문이다. 비록 LCR이 단일 후보 선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진 않았지만 공동전선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덕분에 LO와도 차별성이 형성됐다.

최근 사회당 좌파인 뮐랑송이 사회당에서 탈당해 프랑스판 독일 다링케(좌파당)를 결성했다. 이것은 어찌면 장래 사회당의 더 큰 분열을 예고하는 중요한 사건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프랑스 좌파당과 뮐랑송은 LCR과 브장스노에게서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최근 1930년대 이래 최악의 경제 위기가 발생해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 전면에서 드러난 것도 반자본주의 정치를 중심으로 한 좌파 재편 시도에 대중적 관심을 모으는데 도움이 됐다. 2008년 말 사르코지도 그런 분위기 변화를 의식해 “반자본주의는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였다.

NPA의 과제

NPA가 승승장구할수록 당연히 정부, 기업, 언론은 패닉에 사로잡혀 온갖 역겨운 공격을 계속할 것이다. 운동 내 우파 지도자도 견제를 하고 있다. 민주노동동맹(CFDT) 지도자인 프랑수와 세레크는 NPA가 사업장 앞에서 무기한 총파업 선동을 하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또, NPA로 결집한 사람들 사이에도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맑스주의자인 옛 LCR 활동가들과 좌파케인스주의자인 NPA 유럽의회 선거 후보인 라울 제나르 사이에는 자본주의 위기의 성격, “자본주의와 단절”의 의미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

또, 이슬람주의에 대한 입장처럼 당장 실천에서 중요한 쟁점도 있다. 극좌파를 포함해 프랑스 좌파 다수는 2003년 공립학교 내 ‘종교상징물 착용 금지법’ 논쟁 — 사실상 히잡 착용 금지법 — 에서 무슬림 학생의 선택권을 방어하지 않고 이 법을 지지했다. 무슬림에 대한 인종차별적 편견과 공격에 잘못 대응한 것이다.

LCR 출신 맑스주의자들은 이런 논쟁들, 즉, 자본주의의 성격, 새로운 사회를 향한 투쟁과 이행 문제, 인종차별주의 등 각종 억압과 그에 맞선 투쟁 방식 등에 대한 논쟁에서 주도적 구실을 해야 한다.

또 다른 중요한 도전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지만 반자본주의로 이동하지 않은 다수 노동자 · 민중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다. 이를 위해서는 운동 단체뿐 아니라 다른 좌파 정당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지금 NPA의 입장은 사회당과도 공동전선에서 협력적으로 활동하지만 PCF나 좌파당이 미래에 사회당 중앙 · 지방 정부 참가 가능성을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다면 연합을 함께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올바른 출발점이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동일한 출발점에서 과거 LCR은 반신자유주의의 단일 후보 선발 과정에서 다른 좌파 정당과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객관적 조건 덕분에 LCR은 포괄적 반신자유주의정당은 아니지만 반자본주의자들의 성공적 결집체인 NPA를 출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비록 PCF의 득표율이 추락해 왔지만, 여전히 상당수 전투적 노조 투사는 PCF 지지자다. 또, 사회당에서 분열한 프랑스 좌파당이 사회당에 환멸을 느낀 노동자 민중이 급진화 과정에서 한번쯤 거쳐가는 중간 정거장이 될 수도 있다. 이들과의 관계 문제는 계속 중요할 것이다.

김용욱 기자 | ohatonge@left21.com

메이데이 불허와 집회 원천봉쇄

탄압해도 저항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경찰은 5월 1일 '제119년 세계노동절 범국민대회'를 '불법 집회 우려', '주요 도로 불편 예상' 등의 이유로 불허했다. 이뿐 아니라 5월 2일 촛불 1년에 있을 집회들도 원천봉쇄할 듯하다.

경찰청장 강희락은 "불법 폭력시위에 참가한 불법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사법 조치하고 민사상 책임도 함께 묻겠다"고 했다. 또 후추와 고춧가루 추출물인 캡사이신 성분을 시위대에게 분사하는 것뿐 아니라 최루액도 사용하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은 지난해 촛불 이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캡사이신 분사기 8백80대를 수도권 일선 기동대에 보급했고 올해 4백여 대의 분사기를 추가로 배치해 '제2의 촛불'에 대비해 왔다.

이명박은 자신을 "1년동안 허송세월"(경기도지사 김문수)하게 한 촛불이 메이데이 등을 계기로 '제2의 촛불'로 타오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더구나 지금은 용산 참사, 경제 위기, 대량 해고, 비정규직 확대 등 사회적 불만이 커져이 쌓여 "잠재적 촛불시위자"들이 언제 다시 저항에 나설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검찰과 경찰, 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공안대책회의를 근 1년 만에 다시 열어 집회 강경 대응 방침을 세운 것이다. 한나라당 최고위원 공성진은 "용산참사 1백일째인 29일과 노동절인 5월 1일, 촛불 시위 1주년이 되는 5월 2일에 '좌파체제전복세력' 등이 시위를 계획하는 상황"이라며 전전긍긍했다.

저항 겁내는 정부

그래서 언론 장악 등으로 국민의 눈·귀를 막고 집회·시위 불허와 원천봉쇄로 우리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

심각한 경제 위기를 노동자·서민의 희생을 통해 타개하려는 이명박 정부는 이를 위해 민주주의 파괴에 더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탄압에 의한 통치가 무한정 지속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탄압에 위축돼 굴복하는 것만도 아니다. 용산 참사 항의 운동은 경찰청장 내정자 김석기를 끌어내렸다. 또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진영이 결집한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후보가 한나라당이 지원한 후보를 이겼다. 4.29 재보선에서는 한나라당이 완패했고 진보신당은 울산 북구에서 첫 국회



‘상습시위꾼’ 소환을 규탄하는 학생단체들의 공동집회

사진 임수현

의원을 탄생시켰고, 민주노동당은 전남 장흥과 광주에서 지방의원을 배출했다. 최근 용산범대위 활동가 구속, ‘상습시위꾼’에 대한 무차별적인 소환, <PD수첩>에 대한 집요한 탄압 등은 좌파의 정치적 자신감 회복이 새로운 저항을 촉발시킬지 모른다는 정부의 초조함을 보여 준다.

민주노동당 학생위원장, 고려대 총학생회장, ‘고대네’ 김지윤 씨 등 학생 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소환은 정부의 갑갑이 좌파 활동가들을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상황에서 실용주의적으로 소환에 응하거나 개인에게 대응을 맡겨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 노동자·시민들은 탄압에 맞서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활동가들과 ‘공안탄압 분쇄 학생대책위’의 활동을 적극 지지할 필요가 있다.

메이데이와 촛불 1년 이후에도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와 공안 탄압에 맞서는 저항과 연대는 지속·강화되어야 한다.

박건희 기자 | pkh@left21.com

민생민주국민회의의 촛불 1년 집회 주최 회피는 아쉽다

5월 2일은 지난해 촛불 항쟁의 첫 포문을 열었던 날이다. 이날부터 광우병 쇠고기 수입뿐 아니라 경쟁교육, 민영화, 대운하 등 이명박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이 분출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5월 2일 촛불 1년에 맞춘 행동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촛불 정신 계승’을 선언하며 건설된 민생민주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5월 2일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했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촛불1주

년 집회를 주최하지 않기로 했다. 이명박 정권이 무더기 소환장을 발부하고, 사진채증으로 연행, 구속시키는 상황에서 국민회의처럼 책임있는 단체가 촛불 1주년 집회를 주최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시민들이 탄압에 위축돼 참여가 어려울 것이다.

촛불 항쟁의 성과를 이어받아 이명박 정권에 맞서겠다고 자임한 국민회의는 대중행동을 건설하는 데 보다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최영준

레프트21 5호부터 가격이 오릅니다

최근 MBC는 정부의 압력에 밀려 신경민 앵커를 교체했습니다. MBC 광고수입이 40퍼센트까지 급감했다는 소식은 이 일의 배경을 짐작케 합니다. 대기업 광고주들이 정부 비판적인 인사들을 쫓아내라는 압력을 넣은 것입니다. 공정한 언론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겨레>도 포스코 점거 투쟁을 지원하는 금속노조의 의견광고에 ‘삼성’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겨레>조차 거대 광고주인 삼성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보조금과 기업의 광고수입에 의존하는 언론은 권력과 자본의 압력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레프트21>은 정부의 보조금은 물론이고, 영리기업의 광고를 일절 거부합니다. <레프트21>이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과 체제의 더러운 속살을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돈 없이는 단 한 부의 신문도 발행할 수 없는 자본주의에서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른 진보언론들조차 재정

적 어려움 때문에 기업 광고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레프트21>은 독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에만 의존하다 보니, 큰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신문 판매 수입은 신문사 운영에 필요한 총예산의 3분의 1정도에 불과하며 신문 인쇄와 발송에 드는 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호 수백만 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기자들을 비롯한 신문사 상근자들 대부분이 상근비는커녕 한 톨의 출퇴근 교통비, 식사비조차 받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신문사 운영에 필요한 물품, 심지어 취재에 필요한 자료들도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용지·인쇄 등 제작 비용도 상승했습니다. 독자들의 신문 구독료 부담을 줄이려는 애초 계획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 못내 아쉽지만, 신문사의 유지·운영조차 위협받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가피하게 5호부터 한 호당 1천8백 원(1년 구독비 5만 원)으로 **신문구독료를 인상**하려 합니다. 이 정도 인상으로도 당분간은 적자를 벗어날 수 없는 매우 열악한 재정 상황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 광고나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오로지 독자들의 구독료에만 의존해 신문을 발행하겠다는 본지의 원칙과 신문의 정보량(매호 원고지 400~450매이며, 이는 중편 소설 분량입니다) 등을 볼 때, 구독료가 오르더라도 본지에 대한 애정을 변함없이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존 정기구독자들에게는 종전 가격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럼에도 후원회원이 돼 주시길거나 구독료 인상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맙겠습니다. 모쪼록 구독료 인상에 대한 독자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더 충실한 내용과 노력으로 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상된 구독료 안내 (5호부터 적용) 한 부 1,800원
정기구독 1년 5만 원 / 2년 10만 원



레프트21
후원회원이
돼 주십시오

경제 위기의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노동자·서민들이 월급을 꼬개 후원회비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레프트21>과 같은 좌파 언론은 한두 명의 부자들이 아니라, 노동자들과 인류의 해방을 염원하는 이들의 후원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수록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을 고무하고 대안을 주장하는 <레프트21>과 같은 좌파 신문의 몫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레프트21>은 투쟁하는 노동자, 수탈당하는 사람들, 차별받는 소수자들을 지지하는 순도 1백 퍼센트 반자본주의 신문입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철저히 독립적인 언론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것을 창간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레프트21>의 후원회원이 돼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으로 <레프트21>은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의 진정한 대안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은 주위의 <레프트21> 판매자, 전화 02-777-2792, 웹사이트 http://www.left21.com를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